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혁신적 '규제 혁파'에 달려



- | 강원일보 오피니언 사설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취임 즉시 '규제 혁파'에 나서겠다는 뜻을 강조하면서 김 당선인의 공약인 '규제프리 강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의 규제개혁 핵심 전략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을 통한 규제 관련 권한의 대거 이양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조직개편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전담국과 규제개혁전담팀을 신설해 분야별 특례조항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강원도는 수십 년 동안 자연과 환경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온갖 규제 늪 속에서 지내 왔다. 백두대간, 국립공원, 국유림, 유전자원, 상수원 보호 등 자연분야 규제부터 접경지역, 동해안 철책, 폐광지역, 송전선로까지 엮인 수많은 규제로 손발 묶인 강원도의 몸부림은 처절하기까지 하다.

겹겹이 쌓인 철벽과도 같은 규제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중앙정부와 수도권에서는 환경 논리만 앞세워 강원도와 도민들을 움아매고 움짱달씩 못 하게 한다.

특히 강원도의 중복규제는 심각하다. 단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다. 분단 직후부터 시작된 군사규제가 60여년이 지나 대규모로 해제됐지만, 강원도는 국유지, 보전산지 등 또 다른 규제에 묶여 아무것도 못 하기는 매한가지다. 뿐만 아니라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수차례 난관에 부딪히는 것도 규제로 발목 잡힌 강원도의 현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도에 따르면 강원지역 군사, 산림, 농업, 환경 4대 규제면적은 총 2만1,890km²로 강원도 전체 면적의 130%, 서울시 전체 면적의 36배, 경기도 면적의 2.2배에 달한다. 이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은 33조2,000억원, 생산가치 손실은 29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여부는 강원도를 묶고 있는 이중삼중 규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에 달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설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담국과 규제개혁전담팀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떤 부분부터 규제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치밀한 강원도적 논리가 있어야 한다.

어떤 규제도 처음에 생길 때는 그만한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환경과 관련된 규제가 많다. 이와 연관된 정교한 강원도적 논리로 지역 정치권과 함께 정부를 압박해 나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나아가 국가를 위한 숙명과도 같은 역할이라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 다만 의무만 강조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환경 등을 위해 규제가 불가피한 지역이 있다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행정규제 대신 산림이용 극대화·콘텐츠산업 등 그린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규제는 피해'라는 인식 대신 '규제는 발전'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처:강원일보 오피니언 사설

정부동향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생활안정과 더불어 어르신들 정서 안정에 도움

-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결과, 기초연금 수급 이후 '미래 불안감 감소' 했다는 응답자 지난해 대비 8.3%p 상승 -
-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중 기초연금이 가장 높은 51.6% 차지 -

“내 생활의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재원이 된다고 생각해요.”

“생활 안전판이겠네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자녀 같다, 보험이다.”

“기초연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안 나온다면 엄청난 타격이 오고 자녀들에게 손 안 벌려도 될 것도 벌려야 되고 그런 현상이 올 거예요.”

[출처: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국민연금연구원)]

- 보건복지부는 「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국민연금공단 위탁실시) 」 결과를 토대로 기초연금이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심리상태 조사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 (대상) 연령·지역·성별·소득계층 등 4가지 기준으로 표집한 '21.5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
 - 기초연금 수급을 통해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하는구나'라고 느낀 수급자가 64.4%로 전년도 대비 1.2%p 증가했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63.3%),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52.6%)라고 생각한 수급자도 각각 전년도 대비 8.9%p, 7.5%p 증가했다.
 -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수급자도 53.2%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8.3%p)으로 증가했다.
- 또한 기초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적 측면으로도 고령층 가구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기능했다.
 -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중 기초연금이 5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초연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 (소득 하위 20% 이하) 61.6%, (소득 하위 20~40%) 60.0% (소득 하위 40~70%) 40.1%
 - 수급자 89.3%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했고, '수급액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수급자도 75.7%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월 30만 원으로 인상된 소득 하위 40~70% 수급자의 수급액 만족도는 전체 조사대상 만족도(75.7%)보다 높은 77.8%에 달했다.
-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기초연금이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초연금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 전국 곳곳 폭염 지속으로 상황관리강화

- 폭염 예방 활동을 위한 재난안전 특교세 100억 적극 활용 -

- 행정안전부는 일부 지역에서 폭염 특보가 6월 24일부터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다.
 - *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부지역(' 22.6.26. 16시 이후)
- 인명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 취약계층 건강·안전 확인 등 폭염대책 추진과 상황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온열질환 등 피해 상황을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매일 대처상황을 중앙부처·관계기관과 공유하는 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폭염 대책을 추진토록 하였다.

□ 아울러, 행안부에서는 지난 23일부터 지자체의 적극적인 폭염 대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 특교세 100억 원을 지원하였다.

○ 올해는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일상회복 일환으로 경로당 등 무더위쉼터 운영이 재개되면서 이로 인한 무더위쉼터 운영과 활성화 지원으로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21년77.8억 → '22년100억)하였다.

· 7월과 8월은 평년(7월 24.6°C, 8월 25.1°C)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전망

○ 이번에 특교세는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식수 등 폭염 예방 물품 공급과 고령층 위주 논·밭 작업자 예찰 활동, 행동요령 안내, 야간 무더위쉼터 운영, 도로 물뿌리기 작업 등 다양한 폭염대책 추진과 더불어

- 지능형(스마트) 그늘막 설치,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 확충 등에 지자체에서 폭염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대책에 사용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폭염 대책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소재 디지털화를 통한 제조분야 인공지능 본격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6.28일(화) 오후 화학연구원(대전)에서 「민관 합동 산업소재 디지털화 추진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산업소재 인공지능(AI) 민간 확산 등 소재 디지털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 산업소재 디지털화: ①원료·조성·공정·물성 등 소재정보 데이터의 디지털화(표준화+AI적용), ②가상공간에서 소재설계·개발·생산함으로써 시간·비용 절감, 품질 및 다양성의 획기적 개선

○ ‘참석 기업, 기관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산업소재 데이터 생성·축적과 인공지능 개발·확산하는데 상호 협력함으로써 우리 소재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민관합동 산업소재 디지털화 추진 협의회 발족식 개요

일시/장소 '22.6.28(화) 15:00~16:30 / 화학연구원(대전)

참석 (정부) 산업정책실장, (연구기관) 화학연, 재료연, 세라믹연, 다이텍, ETRI(기업) (금속)세아특수강, 아크로랩스(화학)세프라, 유니테크, (세라믹)STX에너지솔루션, 아모텍(섬유)코레쉬텍, 우주염색, (제조서비스)버추얼랩, 인실리코 등 (지원기관) 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지능화협회, OSP 전략기획단

□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화학, 금속, 세라믹, 섬유분야 등 4대 핵심 소재연구기관 및 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소재 인공지능(AI)의 개발과 민간 확산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축적을 추진해왔다.

○ 산업소재 인공지능(AI)은 학습된 소재개발 단계(원료→조성→공정→물성)별 핵심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행착오를 현저히 감소시켜 개발 비용절감과 신속한 산업소재 설계*가 가능한 차세대 개발방식으로,

· 미국립연구소(NIST)는 소재개발 디지털화가 개발기간 평균 35% 단축(10.2년→6.6년), R&D 효율 71% 향상, 경제적효과 1,230억불 등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발표(*18.5)

○ 그간 정부와 4대 소재 연구기관은 인공지능 개발·고도화를 위해 ①소재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항목 선별(145개 항목)과 ②데이터 생성장비*(MDF) 구축 등을 통한 소재데이터 250만건** 생성·축적, ③산업소재 인공지능 표준모델 개발을 추진해왔다.

· 소재데이터 생성장비(Miniatur Data Factory) : 산업소재 인공지능의 개발·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조건의 소재데이터 생성 장비, 화학·금속·세라믹·섬유 4개 분야 8개 구축(분야별 2개)

** 소재정보은행 축적 데이터 약 150만건 + 8개 MDF의 생성·축적 데이터 약 100만건

○ 오늘 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현재까지 개발된 산업소재 인공지능 표준모델을 공개(8개)하고 상용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데이터 축적을 가속화하는 한편 산업계에 데이터를 제공하여 산업소재 분야의 디지털화를 확산시켜나가기로 하였다.

산업소재 디지털 데이터 축적 현황

데이터 유형 원료정보(18개), 조성·배합(14개), 공정(41개), 물성(78개) 등 총 145개 항목

데이터 규모 현재) 250만건 → '27 목표) 750만건

데이터 생성

소재데이터 생성전용 장비(미니어처 데이터 팩토리, '22.6월 8개 구축완료)

주관 기관

화학연구원(화학), 재료연구원(금속), 세라믹연구원(세라믹), 다이텍(섬유), ETRI(플랫폼)

□ 또한, 이날 산업부는 금년 중 산·학·연·관 합동으로 「산업소재 디지털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임을 밝히고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 전략에는 산업소재 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축적·활용을 확산하고 제조서비스업 등 데이터 유통·활용을 위한 시장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며,

* 정부(공공연구 등)·민관합동 연간 100만건 이상 축적하고, 소재기업이 활용(23년 개통)

○ 작년부터 진행해오던 8개 AI프로젝트를 포함, 금년 4개 AI프로젝트를 추가(4대 분야별 1개)하여 총 12개의 소재개발을 위한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는 내용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12개 소재 디지털개발 AI프로젝트

금속

연료전지용 고탄성 알루미늄(신규), 그린수소 생산용 촉매, 가스터빈 부품용 합금소재

화학

미래모빌리티 접착소재(신규), 올레핀 생산용 촉매, 미래모빌리티용 경량복합재

섬유

바이오매스 기반 섬유소재(신규), 생분해성 섬유소재, 고내광성 친환경 내장재

세라믹

세라믹 섬유복합소재(신규), 미래차용 고신뢰 커패시터, 차세대 연료전지 전극소재

□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제조산업 강국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데이터·AI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라고 강조하고,

○ “이번 프로젝트는 산업소재분야의 계몽 프로젝트로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소재산업의 생존전략이라고 언급하며, 동 협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공동체 정책방향과 과제



전 대 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1.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범위

- 지난 수십년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는데, 지역공동체 정책은 크게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음
 - 1960~70년대의 새마을 운동 이후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각 중앙부처에서는 부처 고유의 목적과 아울러 마을(읍·면·동 혹은 통·리 등)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에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를 개선하고 소득을 개선시켜 왔음
 - 이와 별도로 주민자치 관련 정책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의 가장 말단인 근린생활권(행정구역상 읍·면·동에 해당)에 있어서 자치행정의 주민참여를 높이고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아울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음
- 최근 각 지역과 자치단체에서 지역공동체 정책의 흐름은 마을공동체와 읍·면·동 주민자치의 상보적이며 선순환 관계를 고려하여 두 정책을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마을자치”의 활성화와 같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본 고 역시 통합적 관점에서 지역공동체 정책을 논하고자 함

2. 지역공동체 관련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지역공동체 관련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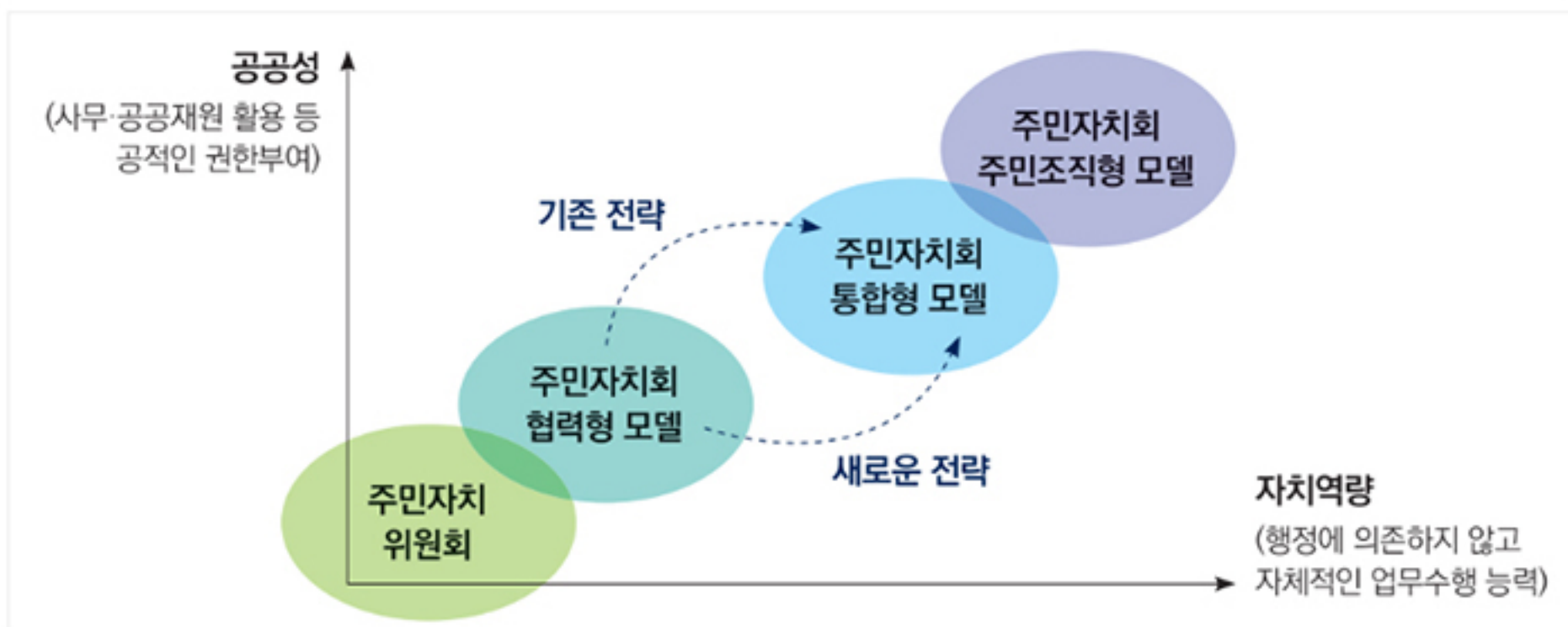
-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하에 6개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고, 6번째 국정목표로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하면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별도의 논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15개 국정과제를 별도로 발표함
 - 15개 균형발전 과제와 관련하여,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고유 특성의 극대화 등 3대 약속과 15개 국정과제의 하위 과제로서 76개 실천과제를 제시함
- 76개 중 지역공동체 관련 과제는, 우선 지역공동체 정책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국정과제①’과 관련된 실천과제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개선”, ‘국정과제⑭’관련 “지역공동체 인프라 조성 및 지역 커뮤니티 활동 촉진” 등을 들 수 있음
 - 또한 ‘국정과제⑨’ 관련 실천과제로서 “농산어촌 생활인프라 구축”, “산촌·어촌의 특화사업확대”, “이웃사촌 돌봄 주민운동”과 같은 농·산·어촌을 위한 과제를 들 수 있으나, 해당 과제의 경우 소위 ‘농·어민 삶의 질 특별법’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중점과제로 추진되어 왔음
 - 마찬가지로 ‘국정과제⑬’ 관련 실천과제 “골목상권 생태계 인프라 구축” 및 “동네·마을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정책연계 강화” 등과 유관 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중소기업부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및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의 정책의 연속선상으로 볼 수 있음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정책 방향

- 전술한 바와 같이 주민자치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개선”을 신규 실천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어 민간의 역량을 강조하고 있음
 - 이는 전 정권에서 주민총회 및 주민세 환원 등 주민자치를 위한 권한부여와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주민자치회 전환으로부터 민간역량을 강화하고 풀뿌리자치 모델의 도입 등을 위한 정책방향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즉, 주민자치(위원)회가 그간 행정에서 필요한 주민협의 기관화 또는 행정과 밀접한 협력을 통해 사무 및 자원 등의 권한을 이양받는 등 공공성의 제고 과정에서 관변단체화되는 것을 지양하고, 순수한 민간의 역량으로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정철학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즉, 아래 그림과 같이 주민자치회의 도입*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공공성과 자치역량 제고를 통해 주민자치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자 할 때, 새 정부에서는 기존 정부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자치역량 견인과는 반대로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공공성의 견인을 추구한다고 해석될 수 있음

- 박근혜 정부에서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해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등의 모델이 논의되었고, 그 중 법제의 제약이 없는 협력형 모델이 도입된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협력형 모델을 추진하되 주민총회·마을계획 수립, 공공재원 활용(정부보조금,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세 환원 등), 위·수탁업무의 강화 등 공적 권한부여를 통한 자치역량 제고를 도모하였음
- 현재까지 “순수 민간(주민)활동의 강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바 없으나,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에 있어서 행정과의 협력 및 공공재원 활용 등의 관 주도 마중물 전략을 지양하고 주민자치·마을공동체 활동(축제, 주민주도 사업 등)에 있어서 가급적 공적 자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순수한 주민역량으로 활동을 지속시키며 자치역량을 견인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새 정부에서는 행정에 의존하지 않는 주민의 실행·실무역량을 강화하려는 정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 역시 자체사업을 통한 수입의 창출 등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사업들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간 또는 주민-행정간 협의체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아직 도입 초기인 주민자치회 역시 그 운영이나 특정 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직역량이나 실무능력이 취약하므로, 이를 제고시키기 위해 기존 분과위원회 또는 실행법인(마을기업 형태 등)을 강화하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

• [그림 1] 주민자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진화모형과 전략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정책 방향

-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 역시 민간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마을·동네 단위의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 소득·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인프라의 강화를 위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즉 관련된 국정과제 및 하위 실천과제에서는 “로컬 브랜드” 및 “골목산업 생태계”와 같은 마을단위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강조하면서, 이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지역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로컬콘텐츠를 강화하고 지역인프라를 강화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 또한 영국의 시민센터(Civic Center)의 및 미국의 커뮤니티센터(Community Center)와 같은 행정기관, 상업시설, 주민활동(모임·여가·스포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 복합공간의 조성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공론·학습·해결의 플랫폼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 이는 지난 정부들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마을·지역단위 시장경쟁력 강화(6차 산업화 등)와 지역·도시재생, 생활SOC 등의 정책이 지속되며, 특히 경제구조 변화추세와 맞물려 보다 작은 생활권에 초점을 둔 상권 강화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쟁력 강화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이러한 국정 기조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마을공동체 정책 중 행정안전부 등에서 추진해 왔던 “마을기업 육성”, “청년공동체 활성화” 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그간 상당 기간 추진되었던 정책사업의 정리 등 기존정책을 정비하는 동시에 새 정부의 기조에 맞는 정책사업의 추진이 전망됨
 - 기존의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같은 마을단위 경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로컬브랜드를 강화하고 판로 및 마케팅 지원, 지역인프라·자산의 활용 등 지원정책과 아울러 청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 강화 및 각종 지원정책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새 정부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및 지역돌봄서비스 강화, 지역안전 제고 등에 있어서 마을기업 및 마을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됨
 - 복지와 안전은 전통적으로 지역공동체의 최우선적인 관심사이자 공동체적 대응이 필요한 것아 중요한 활동 영역이었으며, 기후변화대응 역시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을 위한 마을·지역단위 실천과 대응이라는 점에서 시급한 과제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골목단위 경제생태계의 조성 과 아울러 이와 연계된, 또는 독립적인 복지서비스, 안전활동,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활발한 전개를 예상할 수 있음

알기쉬운 정책용어

2022.06.22. 질병관리청

4차접종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가요?

최신 연구결과로 알려드립니다!

1/6

2022.06.22. 질병관리청

안전한가요?(국내)

국내 4차접종 이상반응 신고율은 0.06%,
그 중 대다수는 근육통, 어지러움과 같은
경미한 이상반응이었습니다.

4차접종
4,257,743건 중

이상반응 신고
0.06%
(2,430건)

이상반응 신고 2,430건 중

경미한
이상반응
93.8%
(2,269건)

경미한 이상반응: 근육통, 어지러움, 두통, 알레르기반응, 메스꺼움 등

*6월 12일 0시 기준

2/6

알기쉬운 정책용어

2022.06.22. 질병관리청

안전한가요?(국외)

이스라엘 연구결과에서도,
이상반응은 피로감, 두통 등 3차접종과 유사하며
경미한 이상반응이 다수였습니다.

3차접종과 4차접종 후 이상반응 비교 결과

이상반응	3차접종 (%)	4차접종 (%)
이상반응 없음	~65	~68
피로감	~18	~15
두통	~15	~12
근육통	~12	~10
감기	~8	~7
인후염	~5	~4
발열	~4	~3
기침	~3	~2
오한	~2	~1
구토 및 오심	~1	~1
설사	~1	~1
호흡 곤란	~0.5	~0.5
장신 췌미	~0.5	~0.5
기타	~8	~7

3/6

2022.06.22. 질병관리청

효과적인가요?(국내)

국내 고위험군 대상 접종효과 분석 결과,
4차접종은 3차접종과 비교해
중증화·사망위험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의 3차접종 대비 4차접종 예방효과

항목	예방효과 (%)
감염	20.3% [95% CI, 19.5-21.0]
중증화	50.6% [95% CI, 45.8-55.1]
사망	53.3% [95% CI, 48.1-57.9]

*3차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 약 151만 명 대상(2/16~4/30)

4/6

알기쉬운 정책용어

2022.06.22. 질병관리청

효과적인가요?(국외)

국외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하게,
감염 및 중증화·사망에 대한
추가 예방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스웨덴 연구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25,252명 대상)*

사망 예방효과	31% (14-45%)
---------	--------------

4차접종 후 87일 동안 관찰

이스라엘 연구

(60대 이상 18만 명 대상)**

감염 예방효과	52% (49-54%)
중증 예방효과	64% (48-77%)
사망 예방효과	76% (48-91%)

4차접종 후 14-30일 후

*Effectiveness of a second COVID-19 vaccine booster on all-cause mortality in long-term care facility residents and in the oldest old: a nationwide, retrospective cohort study in Sweden(LANCET preprint, 2022)
**Fourth Dose of BNT162b2 mRNA Covid-19 Vaccine in a Nationwide setting(NEng J Med, 2022)

5/6

출처: 정책브리핑 카드뉴스